

우병우 구속 사유 '이석수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뒷조사하도록 한 혐의 지적... 범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인정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악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으로 인해 세 번 째 영장심사에서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관리행위사건에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감찰관 불법 사찰 관련 혐의를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의혹을 감찰해 우 전 수석과 갈등을 빚은 인물로, 우 전 수석이 당시 섭섭함을 토로하며 "왜 감찰을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추 전 국장 등 사건 중요 관계자들이 혐의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내놓은 바 있고, 문건 등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정상 업무의 일환으로 봤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률의 부지(不知)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과 같은 법률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먼저 우



"최고위원직 사퇴하겠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주원(오른쪽)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박 최고위원.

전 수석이 받고 있는 다양한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지시·운영 등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 및 물적 증거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혐의가 구속 결정타가 됐다. 우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

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 전 감찰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점이 구속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구속 위기에서 모두 벗어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특히 두 번째 영장의 경우에는 혐의 내용과 관련해 범죄 성립을 다룰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칠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법원은 권 부장판사였다.

그러나 결국,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 한 혐의로 끝내 달미가 잡혔다. /뉴스

강용구, 전북창업보육협 감사패

전북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 강용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 농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지역산업의 발전과 기업 창업에 앞장 선 공로로 전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회장 김영철)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4일 전주 리마다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강용구 부위원장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고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더욱 많은 기업인들이 전북에서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인프라를 만들 것이고 잠재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은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한·중, 고난 동지... 신의 더 발전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며 "저는 이번 중국 방문이 이런 동지적 신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또한 저는 중국과 한국이 '식민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담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한국민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중국과도 이웃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및 이로 인한 국내 긴장 고조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립과 대결이 아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중국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어 내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 25년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놀라운 만한 협력을 이뤄 왔고, 한·중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며 "양국은 경제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중국의 성장은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오랜 역사에서 보듯이, 또한 수교 25년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증명하듯이, 양국은 일방의 변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고 저는 믿는다"며 "그간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ICT·신재생 에너지·보건의료·여성·개발·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중간 전략적 정책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안철수·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각각 19, 20일 개최

안철수·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19일,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실시계획 등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명씩,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이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간사로 정성호·조응천·박찬대·송기현 의원, 한국당은 윤영석 의원을 간사로 백승주·이민희·김진태 의원, 국민의당은 김삼화 의원을 간사로 송기석 의원. 바른정당에서는 지상욱 의원이 참여한다. /뉴스

'영광원전 지방세 고창에도 분납' 청원서 전달

도의회 장명식 의원, 국회 방문 민주당 간사 진선미 의원에게 주민 6281명 서명 전달

전라북도의회 장명식(고창2)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진선미 의원을 만나,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고창에도 분납하도록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을 만나 「지방세법」 제144조 개정을 촉구하는 6,281명의 주민 청원서를 전달했다.

장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매년 납부하는 6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고창에는 한푼도 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

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지난 11월부터 12월 14일까지 고창 주민 6,28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원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명식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고창 주민들의 피해가 영광보다 크고, 2015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고창과 부안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전북은 이렇다 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성 기자

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영광과 전남이 독점하면서, 고창과 부안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명식 의원은 지방세법 제144조를 개정해 지방세를 고창과 부안에도 분납하도록 도의회 5분발언과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장 의원은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차원에서 토론회와 국회와 청와대 1인 시위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경

전주상공회의소 효자동시대 개막

축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풍신로 276 (효자동3가)
전화 : 063-280-1100

오피스텔 매매·임대 (8층~11층)

A A' FGH TYPE

B B' TYPE

C TYPE

D TYPE

E TYPE

I J TYPE

전주상공회의소 오피스텔 매매가 및 임대						매매가		임대가	
타입	세대수	전용면적(㎡)	계약면적(㎡)	매매가격(원)	계약금(10%)	잔금(90%)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A	19	28.33	63.3793	124,619,000	12,461,900	112,157,100	10,000,000	500,000	
A'	4	30.02	67.1603	132,053,000	13,205,300	118,847,700	10,000,000	530,000	
B	4	54.86	122.7319	241,321,000	24,132,100	217,188,900	10,000,000	968,000	
B'	3	54.76	122.5083	240,881,000	24,088,100	216,792,900	10,000,000	966,000	
C	8	38.11	85.2590	167,640,000	16,764,000	150,876,000	10,000,000	673,000	
D	8	39.31	87.9439	172,919,000	17,291,900	155,627,100	10,000,000	694,000	
E	4	44.26	99.0177	194,693,000	19,469,300	175,223,700	10,000,000	781,000	
F	8	28.50	63.7598	125,367,000	12,536,700	112,830,300	10,000,000	503,000	
G	3	27.20	60.8514	119,649,000	11,964,900	107,684,100	10,000,000	480,000	
H	2	41.85	93.6261	184,092,000	18,409,200	165,682,800	10,000,000	738,000	
I	6	59.21	132.4640	260,457,000	26,045,700	234,411,300	10,000,000	1,045,000	
J	4	59.36	132.7992	261,116,000	26,111,600	235,004,400	10,000,000	1,048,000	